

부끄럽다, 문화수도

제역할 못하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부족에 정원 못채워 인력 양성 차질

문화산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부족한 교수인력과 학생 지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14년 개관예정인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문인력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향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제1기생을 모집한 지난 2006학년도에는 경쟁률이 4.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설립 2년째인 2007년 교수의 성비하 발언과 성추문 파문 등으로 인해 교수가 교체되고, 학생들의 시위와 휴학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전문대학원은 학내 및 교수 간 불협화음과 이미지 실추, 여기에 학생 지원 감소까지 겹치면서 설립 4년만에 일약 인기 대학원에서 정원으로 채우지 못하는 대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화전문대학원은 30명 정원에 2006·2007년에는 30명이 입학했으나 2007년 성추문 파문 이후 2008년에는 지원이 급감하면서 21명, 2009년에는 18명이 입학했다.

더욱이 설립 초기 5명이던 전임교수가 현재 4명 밖에 되지 않아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문화산업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 부족으로 인해 급변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은 고사하고, 문화기획이나 관광 등 필수 분야의 교육마저 부족하다는 게 대학원 졸업생들과 지역 문화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문광부나 지자체 산하 문화교육 기관, 박물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시 필요한 인력의 지역 내 양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사립대의 문화 관련 대학원 운영 및 개설

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인 안동대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을 개설, 2010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자칫 문화수도를 견인할 고급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전문대학원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문화수도 사업은 광주라는 도시를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는 국책사업인 만큼 이에 적합한 문화전문인력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지도자들이 모여 지역에서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대학원 설립 초기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컸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원활하고, 졸업생들의 문화분야 진출도 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문화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주여성 이야기 들어볼래요”

23일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 이야기 한마당’ 행사에서 중국·필리핀 여성 등 금호한글교실 초급반 수강생들이 캐럴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고검 토착비리 수사팀 신설

이대통령, 각종 비리 척결 초강경 드라이브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MB 정부가 각종 비리 척결에 대해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법무부는 광주고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토착비리 수사팀을 신설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유

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비리 근절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와 사이버언론 등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된 기초지자체장의 당선무효가 잇따르고 공기업 임직원의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거론하며 “이런 비리의 온상에는 토착세력과 사이버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이 사법 당국에 보다 강도 높은 비리 척결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고, 지역에서는 이른바 ‘연줄’이 작용해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광주고검 등 전국 5개 고검 및 주요 지검에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토착세력의 각종 이권 개입과 공무원 비리 등을 철저히 수사기로 했다.

광주고검의 경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디지털분석팀이 설치될 예정이며, 대전고검과 부산고검에는 각각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추적·범죄수익 환수팀 등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또 범정부적인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 및 협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향후 지역 토착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범죄정보 교환 및 분석, 수사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인구대비 공연횟수 광주 10위·전남 15위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인구 대비 공연 횟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에 머물고 광주 역시 10위에 그치는 등 ‘예향’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3일 펴낸 ‘2009 문예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극·무용·음악 등 전체 공연건수는 모두 9천650건이었으며 공연 횟수는 4만 1천 815회였다. 이

중 광주의 경우 공연 건수와 횟수는 290건과 462회로 조사됐으며 전남은 각각 192건과 244회였다.

이중 인구 10만명당 공연횟수를 집계한 결과 광주는 32.5회로 10위에 머물렀다.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90.1회), 부산(54.7회), 제주(46.7회) 순이었으며 강원(42.4회), 경남(40회), 전북(39.5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공연 건수의 경우는 20.4건으로 9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는 제주가 33건으로 서울(31.1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29.3건), 부산(26.1건)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공연횟수는 12.7건으로 10.3건을 기록한 충남 덕에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U대회 지원법 문방위 통과 조직위 내년 1월26일 출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 23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 통과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15 광주U대회 지원법은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2015 광주U대회 지원법을 통과시킨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U대회 지원법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광주U대회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직위 설립은 물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U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1월26일 출범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바른 첫출발 습관 식후 세 번 씻기가 권
정기적인 구강검진 1년에 1~2회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입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업회